

#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의 조절 효과\*

김진석\*\* · 오연희\*\*\* · 신동인\*\*\*\*

##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가 간주할 수 있는 무상 보육 실시 기점인 2013년도를 전후로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여부와 정부 신뢰, 그리고 복지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보편적 복지의 경험 전인 2006년과 경험 후인 2016년 한국사회조사(KGSS)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복지 인식이 오히려 낮은 것을 확인했고 정부 신뢰는 유의미한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의 조절 효과는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복지인식, 정부신뢰와 복지인식 간의 관계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즉,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55세 미만의 집단은 같은 조건의 65세 이상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에 따른 복지 인식의 차이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65세 이상보다 35세 미만 집단과 55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에서 정부 신뢰가 낮을수록 복지 인식이 높아지는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국적 대표성을 획득한 한국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의 복지 인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여부, 정부 신뢰 정도를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여부와 정부신뢰, 복지인식 사이에서 연령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 결과는 복지 인식 형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의 자기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급격한 지형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복지제도에 대한 더욱 발전적인 논의를 제시한다.

**주요어:** 복지 인식,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무상 보육, 정부 신뢰, 연령의 조절 효과

\*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2022-0251).

\*\* 교신저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jskim@swu.ac.kr)

\*\*\* 공동저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oyh@swu.ac.kr)

\*\*\*\* 공동저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dishin36@gmail.com)

## 1. 서론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의 복지 정책은 급속히 발전하여 많은 부분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2021)의 OECD 주요국 공공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통계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2019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평균인 20.0%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1990년과 대비해 4.7배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복지 지출과 국민부담률 간 관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부담률 26.7%,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10.8%로 여전히 OECD 평균 이하의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해당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2050년대 중후반 경에는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혔다(국회 예산정책처, 2021).

한 국가의 복지 확대 방향을 전망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인식은 해당 사회의 복지국가 발전 수준과 특성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복지제도 및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박찬용·정동철·조선미·김노을, 2014; 이상록·이순아·김형관, 2017). 복지 인식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 수요를 예상하고 국가 개입 여부나 개입 수준의 정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준거가 되며, 나아가 시민들의 책무 부담에 대한 의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척도로써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권승, 2012).

시민들의 복지 인식은 국가의 제도에 따라 달리 형성될 수 있고(Blekesaune and Quadagno, 2003), 국가의 제도나 정책 수준은 어떠한 요인보다 복지 인식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Busemeyer et al, 2019). Korpi와 Palme는 국가가 빈곤층에게만 표적화(targeting)하여 복지 자원을 배분하는 것보다, 오히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과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을 검증한 바 있다(Korpi and Palme, 1998). 재분배의 역설은 복지 프로그램이 선별적일 때보다 보편적일수록 해당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지지 정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체 재분배 예산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남재욱·신혜리, 2017).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제도 효과는 복지국가의 제도가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취하면서 동시에 복지국가 지지 경향을 형성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Esping-Andersen, 1990, Pierson, 2001; Larsen, 2007).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잔여적 복지제도라는 특성을 보이다가, 시민들이 보편적 복지 제도의 도입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인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2013

년도 전면적 무상 보육 확대 등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급여 대상의 기여도나 자산조사에 따른 차등급여 방식이 아닌 균등 급여를 행하는 형태에서 그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데(이태수, 2016),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무상 보육이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0~5세 아동 전체 무상 보육 시행이 확정됨으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정책을 갖게 되었다(백선희, 2015). 이로써 한국 사회의 무상 보육제도라는 보편적 복지의 실시 전후로 시민들의 복지 지지나 인식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편, 복지 인식의 양상을 분석할 때 보편적 복지 경험과 함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변수는 정부 신뢰이다. Edlund(2006)는 제도 신뢰의 핵심 요소는 국가를 이끄는 정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시민들이 정부가 효과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신뢰한다면,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부패를 조장한다고 인식하는 상황보다 공적 복지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무리 복지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확대에 대한 동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손병돈, 2016; 최고은, 2016) 동시에 복지제도 발전에 중요한 설명력을 제공해준다(Hetherington, 2004). 정부 신뢰 정도는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지지 가능성 또는 복지국가 발전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Gainous et al, 2008),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 인식과 관련한 연구들은 제도나 정부 등의 거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미시적 결정 요인들도 핵심적인 변수로 연결해왔다(류진석, 2004). 다양한 연구들은 복지 인식에 대한 미시적 결정 요인으로 자기 이해(self-interest)를 상정하고 있다(김영순·여유진, 2015;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손병돈, 2016; 최유석, 2011). 국가의 모든 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결국 해당 정책과 프로그램이 자신의 이해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승, 2012). 특히 그 중 연령은 생애과정에서 자기 이해 효과로 설명되는 중요한 변수임이 제시된 바 있다(Bonoli and Häusermann, 2009; Gugushvili, 2015; Riekhoff, 2021; 권승, 2012; 노혜진·이현옥·김윤민, 2018; 류진석, 2004; 서복경·황아란, 2012; 이승주·박소영, 2019; 이상록 외, 2017). 복지 인식의 결정 요인들 중 인구학적 요인은 구조적 요인과 중첩되어 나타나고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겪은 고유한 경험을 통해 상이한 인식으로 표출된다(최유석, 2011). 따라서 구조적 요인인 보편적 복지 경험과 정부 신뢰가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에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개인적 수준의 연령이라는 변수의 조절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한국 사회의 보편적 복

지 제도 도입과 실시 전후의 복지 인식을 비교한다. 즉, 무상 보육이라는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여부가 복지국가의 일반적인 또는 타분야에 대한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무상보육제도가 실행되기 이전 시점에서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복지 태도 형성의 결정 요인을 확인하거나(권승, 2012), 복지 정책별로 각각 그에 상응하는 복지 인식을 분석하였다(노혜진·이현옥·김윤민, 2018; 박찬웅 외, 2014). 또한 남재욱과 신혜리(2017)의 연구에서는 복지 제도 수급 경험에 따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복지 인식과 타분야까지의 복지 인식의 변화를 다루었지만 무상 보육이 아닌 기초연금 수급 경험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 특정 복지 제도 수급 여부가 아니라 국내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제도로서 무상보육 제도 도입 경험을 전후로 일반적인 복지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해당 지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복지 제도 도입 이후 제도의 직접 수혜 여부는 그 자체로 복지 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이나 보편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집단과 애초에 경험하지 않은 집단 사이의 비교를 통해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차별성이다. 둘째, 복지 인식을 설명하는 변수로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함께 정부 신뢰 정도를 고려한다. 한 사회에서 정부의 공적 책임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Hetherington, 2004), 정부 신뢰는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에 따른 복지 인식 변화를 살펴볼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이다. 복지 인식과 정부 신뢰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요 결정 변수로 개인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선호도나, 복지 지위 등을 우선적으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정부 신뢰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임재영·문국경, 2019; 최고은, 2016). 셋째, 복지 인식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이 미치는 영향, 정부 신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각 관계별로 연령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다루면서 연령의 측면을 고려한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전체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 준보편적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의 수급경험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남재욱과 신혜리(2017)의 연구는 대상을 노인으로 하고 있다. 서복경과 황아란(2012)의 연구에서는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태도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면서 정부 신뢰를 함께 다루고 있지만 고령자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40대 이상의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상보육 시행 전후라는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의 경험이 일반적인 복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때, 정부 신뢰가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각각의 주요 변수가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18세 이상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는 대상으로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규명하고 보편적 복지국가

로의 변화에 필요한 논의와 합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1.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여부가 복지 인식과 관련이 있는가?
- 연구 문제2. 정부 신뢰 정도는 복지 인식과 관련이 있는가?
- 연구 문제3. 연령은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복지 인식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 연구 문제4. 연령은 정부 신뢰와 복지 인식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 2. 이론적 배경

### 1) 복지 인식의 개념과 관련 요인

복지 인식이란 국가의 복지제도 및 복지 현상에 대한 가치, 신념, 태도 등으로(강정희·염동문, 2014), 이는 복지의식, 복지 태도 등과 유사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 인식과 복지 태도 등의 용어를 개념상으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 이정화와 문상호(2015)는 복지인식과 복지태도를 각각 다른 변수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복지 인식 및 복지 태도는 대체로 유사한 속성들을 측정하여 구별근거가 모호하고(강정희·염동문, 2014; 임재영·문국경, 2019) 복지 인식과 복지 태도의 용어를 혼용하거나(노혜진·이현옥·김윤민, 2018) 복지태도를 복지인식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이상록·김형관, 2013).

또한 복지인식은 추구하는 가치, 태도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포괄성과 추상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먼저 류진석(2004)에 따르면 복지태도는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제도의 선호성, 복지재정의 확충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노대명과 전지현(2011)은 재분배원칙, 개별제도, 재정부담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인식의 구성은 복지인식과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복지제도 및 재정부담의 책임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생각과 선호도가 복지인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복지 인식을 복지영역에서의 국가책임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정희·염동문, 2014; 김사현, 2012; 박찬웅 외, 2014; 손병돈, 2016; 이현우·박시남, 2016; 임재영·문국경, 2019; 최고은, 2016; 최유석, 2011; Andreß and Heien. 2001;

Arikan and Bloom. 2015; Blekesaune and Quadagno, 2003). 구체적으로, 돌봄, 교육, 보험, 연금, 소득 격차 해소 등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강정희·염동문, 2014; 김사현, 2012),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지출 증가 및 증세에 대한 생각(손병돈, 2016; 이현우·박시남, 2016; 최고은, 2016),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 지지도(박찬웅 외, 2014; 임재영·문국경, 2019; 최유석, 2011; Andreß and Heien. 2001; Arikan and Bloom. 2015; Blekesaune and Quadagno, 2003) 등으로 복지 인식을 측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책임 지지도를 통해 복지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구성원의 복지 인식은 해당 사회의 복지국가 발전수준과 특성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복지제도 및 정책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박찬웅 외, 2014; 이상록·이순아·김형관, 2017). 일반 대중의 견해와 태도는 정책변화를 촉발시키는 자원이자 기회로 기능하는 동시에 현재 또는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Svalfors, 2010, 이정화·문상호, 2015에서 재인용). 이때 복지정책은 정책비용부담자와 정책수혜자가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복경·황아란, 2012) 다른 정책에 비해 사회구성원의 합의와 지지를 더욱 필요로 한다(강정희·염동문, 2014). 따라서 복지확대의 방향성을 전망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지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교육수준, 가구소득, 정치적 성향 등이다. 먼저 성별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정부지출, 정부책임영역 확대 및 복지정책 지지 등의 복지인식은 여성이 더 높거나(김사현·홍경준, 2010;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박찬웅 외, 2014; 안상훈, 2003; 이승주·박소영, 2019)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순·여유진, 2011; 류만희·최영, 2009; 임재영·문국경, 2019; 최유석, 2011). 반면 남성이 더 복지인식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여(노혜진·이현옥·김윤민, 2018; 서복경·황아란, 2012; 이현우·박시남, 2016) 성별 요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육수준 요인 또한 복지확대 및 복지정책 지지도에 있어 상이한 경향을 보였으며,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경우와(류만희·최영, 2009; 류진석, 2004; 이현우·박시남, 2016) 부적 상관을 갖는 경우(노혜진·이현옥·김윤민, 2018; 박찬웅 외, 2014)가 있었다. 또한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영순·여유진, 2011;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백정미·주은선·김은지, 2008; 임재영·문국경, 2019). 가구소득은 많은 연구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책임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거나(강정희·염동문, 2014;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김희자, 2013; 이승주·박소영, 2019; 최유석, 2011)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노혜진·이현옥·김윤민, 2018; 서복경·황아란, 2012; 임재영·문국경, 2019). 정치적 성향은 진보적일수록 정부의 책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김윤태·유승호·이훈

희, 2013; 김희자, 2013; 서복경·황아란, 2012; 최유석, 2011)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김수정·남찬섭, 2015; 손병돈, 2016). 이와 같이 각 요인과 복지 인식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가 상이하거나, 전반적인 경향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복지 인식을 측정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했을 때 일관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요인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복지 인식

Korpi와 Palme는 20여년 전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두 가지 방안-사회 정책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보편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결과로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을 제시하였다. 즉, 국가가 빈곤층에게만 표적화(targeting)하여 복지 자원을 배분하는 것보다, 오히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과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Korpi and Palme, 1998). 최근까지 복지국가 사회 정책의 효과성을 논할 때, Korpi와 Palme의 ‘재분배의 역설’은 실증적 연구들로 그 유효함이 검증되어왔고(Brady and Bostic, 2015; Jacques and Noël, 2018) 관련 연구들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제도효과에 집중해왔다(Dallinger, 2010; Edlund and Lindh, 2015; Vrooman, 2012). 이는 복지국가 제도가 시민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취함과 동시에 복지국가 지지 경향을 형성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Esping-Andersen, 1990; Pierson, 2001; Larsen, 2008).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으로는 2013년에 실시된 무상 보육을 꼽을 수 있다. 한국사회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한 내부 유형을 지니고 있지만 특히, 무상 보육은 급여 대상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여도나 자산조사에 따른 차등급여 방식이 아닌 균등 급여를 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이태수, 2016). 또한 무상 보육은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제도의 전면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큰 쟁점을 가진 정치이슈로 주목받았기 때문에(김현진, 2012; 이진숙, 2012) 많은 사회구성원이 보편적 복지정책을 인지하고 고민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육 지원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비용 부담과 관련된 형평성과 이용가능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김종해, 2005). 이와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가 대두되면서(이재무·송영선, 2012) 보육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이진숙, 2012). 이에 따라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2011년에는 영유아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하였다가 2013년에 전 계층에게 확대되어 보편화되었다(이정원·이혜민, 2014). 이로써 우리나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

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정책을 갖게 되었다(백선희, 2015).

복지 경험과 복지 인식을 다룬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먼저, 남재욱과 신혜리(2017)는 한국복지패널 2차(2007년)와 11차(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을 전후로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경험이 수급자의 일반적 복지국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수급 경험이 노인들의 일반적 복지국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일부 높이고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보다 자기 이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금 수급 경험이 부분적으로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복지 경험이 자기 이해와 관련된 구체적 프로그램인 경우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 이해관계가 아닌 타분야의 일반적 복지국가 측면에 대한 인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남재욱과 신혜리(2017)의 연구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도입되어 2014년 법과 제도 개편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기초연금의 수혜 경험을 복지 경험 변수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가 보편적 급여로서의 기초연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실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라는 선별성은 유지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보편적 급여로 지급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백히 선별적인 복지제도의 수혜 경험을 다루고 있다. 실제 2014년 기초연금으로의 개정 이후에도 선거 등 주요 정치적 국면마다 기초연금을 보편적 복지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제안<sup>1)</sup>이 제기되는 등 기초연금을 보편화가 필요한 대표적 선별 복지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이상록 외(2017)는 개인 복지 태도의 중단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태도의 변화 양상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국복지패널 2010년, 2013년, 2016년도 복지 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10~2013년도에는 보편주의 복지에 대해 반복지적 태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13~2016년도에는 친복지적 태도 변화가 높게 나타나 정치 사회적 상황이나 복지 이슈에 따라 복지 태도의 변화 분포가 역동성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을 전후로 복지 인식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시행된 무상 보육 실시를 기점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기본소득발 보편복지논란, 기초연금으로 확전?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78288/](http://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78288/)(2021. 9. 12); “기초연금‘월 40만원’전체에게 확대 띄우는 민주당... 왜?” [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9131659001](http://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9131659001) (2022. 9.13)



### 3) 정부 신뢰와 복지 인식

Edlund(2006)에 따르면 제도 신뢰의 핵심 요소는 국가를 이끄는 정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시민들이 정부가 효과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정부를 신뢰한다면,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부패를 조장한다고 인식하는 상황보다 공적 복지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Edlund, 2006). 또한 정치적 정책 결정 기구인 의회의 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부의 정책 수행 결과가 곧 공공영역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신뢰 요인은 국민의 국가 역할 범위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된다(이현우·박시남, 2016). 정부에 대한 불신 또는 양가감정의 혼재는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가능성의 감소로 이어지기도 한다(Gainous et al, 2008). 아무리 복지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확대에 대한 동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클 것이며 이는 결국 지원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Garritzmann et al(2021)은 정부 신뢰 정도가 미래지향적이고 확실한 복지국가 개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기 이해나 이익, 이념적 관점이 미치는 효과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손병돈, 2016) 동시에 복지제도 발전에 중요한 설명력을 제공해준다(Hetherington, 2004).

최근 국내 연구들도 한국사회의 복지지형 변화와 함께 복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신뢰에 주목하고 있다. 이현우와 박시남(2016)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변수로 정부신뢰와 정부평가를 투입하였다.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부 평가 중 개인영역에서 정부를 낮게 평가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은(2016)은 복지인식을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보았는데 정부신뢰가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 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부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 부담 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 4) 연령과 복지 인식

우리나라의 급격하고 활발한 복지 이슈 변화에 따른 관련 연구들은 복지 인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설명변수로 자기 이해(self-interest)를 상정하고 있다(김영순·여유진, 2015; 김운태·유승호·이훈희, 2013; 손병돈, 2016; 최유석, 2011). 복지 인식은 해당 복지 프로그램이 자신의

이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Daatland et al, 2012), 그 중에서 특히 연령은 복지 인식의 중요한 공통요인이자 생애과정에서 자기 이해 효과로 설명되는 중요한 차원임이 제시된 바 있다(권승, 2012; 노혜진·이현옥·김윤민, 2018; 류진석, 2004; 서복경·황아란, 2012; 이승주·박소영, 2019; 이상록·이순아·김형관, 2017; Bonoli and Häusermann, 2009; Gugushvili, 2015; Riekhoff, 2021).

보편적 복지 경험은 일반적 복지국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일부 높일 수 있지만 자기 이해와 관련된 구체적 프로그램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남재욱·신혜리, 2017). 구체적으로 보육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연령이 낮을수록,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에 서비스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권승, 2012)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보편적 복지 경험 여부가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자기 이해와 관련된 연령이라는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할수록 공적 복지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Edlund, 2006) 국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데(주혜린·황정윤, 2020; Gainous et al, 2008), 서복경과 황아란(2012)의 연구에서는 정책 결정자에 대한 신뢰가 국민의 복지 확대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대별로 차별적인 것이 확인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가 정책비용부담 의사에 미치는 방향은 동일하였지만, 40~64세 집단은 65세 이상 집단과 달리 대통령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정책비용 부담 의사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는 정부 신뢰가 복지 인식에 미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접근도 존재한다. Norris는 ‘비판적 시민’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치 체제로서는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정부의 수행과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집단으로(Norris, 1999), 정부나 정치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다(Doorenspleet, 2012). 서복경과 황아란(2015)은 Norris의 ‘비판적 시민’ 개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민주주의 정치 체제 지지는 높고 정부 신뢰는 낮은 ‘비판적 시민’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젊은 연령대가 다른 세대보다 ‘비판적 시민’의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면 정부 신뢰 정도가 낮으면서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복지 경험과 정부 신뢰가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이에 대한 각 관계에서 연령변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로 칭함)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secondary data analysis)을 실시하였다. KGSS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기본모형으로 하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요 사회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국제 비교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된 전국 단위의 표본조사이다. KGSS의 설문지는 매년 반복하는 반복 핵심설문과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회원국들이 공동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에 대한 인식 관련 모듈조사는 위에 언급한 연차적 주제모듈의 하나로서 2006년부터 10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정부의 역할 관련 ISSP 주제 모듈조사가 이루어진 2006년과 2016년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pooled data)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KGSS 2006, 2016년 자료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에 기반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김지범 외, 2019). 유효 사례 수는 각각 1,605명, 1,051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2,656명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 2) 측정 변수

##### (1) 복지 인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복지 인식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의 지지도(박찬웅, 2014)로, 사회복지가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분야 별 정부의 책임에 대한 총 10개의 문항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6개 문항,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환자에게 보건의료 제공’,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제공’,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 제공’, ‘빈부 간 소득 격차 완화’,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 제공’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문항은 4점 척도(당연히 정부 책임이다, 아마도 정부 책임이다, 아마도 정부 책임이 아니다, 당연히 정부책임 아니다)로 측정되었으며, 6개 문항 모두 역점수로 하고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06년과 2016년도 변수의 Cronbach's alpha는 .7447이다.

## (2)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은 2013년에 시행되었던 제도로서의 무상보육 제도 도입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무상보육을 경험하지 않은 2006년 응답자들을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정책 시행 이후 2016년의 응답자들을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코딩은 응답자별로 2006년 해당은 0, 2016년은 1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상 2016년 응답자들 가운데 실제 무상보육의 수혜를 받았는지 여부는 구분하지 않았다.

## (3) 정부 신뢰

정부 신뢰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는 정치적 태도(배정현, 2013)로서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사회기관들을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설문 문항 중 정부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중앙 정부부처, 지방자치정부, 국회, 대법원, 청와대 5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매우 신뢰’, ‘다소 신뢰’, ‘거의 신뢰하지 않음’으로 측정된 3점 척도이며 모두 역점수화하여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신뢰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변수는 5문항을 합산하여 측정하였고 Cronbach's alpha는 .7917이다.

## (4) 통제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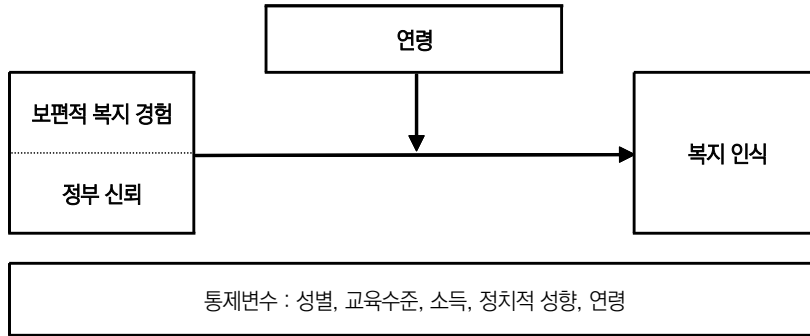
통제변수는 성별, 교육수준, 소득, 정치적 성향, 연령을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0, 여성은 1로 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무학(=0), 초졸(=1), 중졸(=2), 고졸(=3), 전문대졸(=4), 대졸(=5), 대학원졸(=6)로, 소득은 없음(=0), 150만원 미만(=1),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3), 500만원 이상(=4)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정치적 성향은 역점수화하여 매우 보수적(=1), 다소 보수적(=2), 중도(=3), 다소 진보적(=4), 매우 진보적(=5)으로 구성하여 활용하였고, 연령은 35세 미만(=1), 35세 이상 45세 미만(=2), 45세 이상 55세 미만(=3), 55세 이상 65세 미만(=4), 65세 이상(=5)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3) 연구모형 및 자료 분석

본 자료의 분석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특성과 주요 변수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편적 복지경험 및 정부신뢰와 복지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보편적 복지경험 및 정부 신뢰와 복지 인식의 관계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연령과 보편적 복지 경험, 연령과 정부 신뢰의 상호작용을 회귀모형에 포함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tata SE 14를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4. 연구 결과

본 연구 대상자인 2,656명을 기준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44.8%(1,189명), 여성이 55.2%(1,4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의 분포는 대학교 졸업이 33.3%(88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졸이 높은 순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에 응답한 사람이 27.7%(69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26.2%(6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은 25.5%(641명), 150만원 미만은 19.8%(4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은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5.5%(90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소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9.6%(753명), 다소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7.1%(6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보수적,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4.5%(114명), 3.5%(88명)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청년으로 정의되는 35세 미만이 29.2%(77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5세 이상 45세 미만이 22.7%(6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상 55세 미만이 18.9%(503명), 65세 이상이 17.3%(460명), 55세 이상 65세 미만이 11.8%(313명) 순으로 비율을 보였다.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복지인식의 평균은 17.92, 표준편차는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사람은 39.57%(1,051명),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60.43%(1,605명)이었다. 정부 신뢰는 평균은 7.91, 표준편차는 2.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의 특성

구분	변수	빈도(n)	%	전체(N)	Mean(SD)	
주요 변수	복지 인식	-	-	2,626	17.92(3.22)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했음	1,605	60.43	2,656	-
		경험하지 않았음	1,051	39.57		
		정부신뢰	-	-	2,616	7.91(2.30)
통제변수	성별	남	1,189	44.8	2,656	-
		여	1,467	55.2		
	교육수준	무학	119	4.5	2,650	-
		초졸	263	9.9		
		중졸	198	7.5		
		고졸	747	28.2		
		전문대졸	293	11.1		
		대졸	882	33.3		
		대학원	148	5.6		
		소득	소득 없음	20		
	150만원 미만	499	19.8			
	150만원 ~ 300만원 미만	659	26.2			
	300만원 ~ 500만원 미만	698	27.7			
정치적 성향		500만원 이상	641	25.5	2,547	-
		매우 보수적	114	4.5		
		다소 보수적	753	29.6		
		중도	903	35.5		
		다소 진보적	689	27.1		
연령		매우 진보적	88	3.5	2,656	-
		35세 미만	776	29.2		
		35세 ~ 45세 미만	604	22.7		
		45세 ~ 55세 미만	503	18.9		
		55세 ~ 65세 미만	313	11.8		
	65세 이상	460	17.3			

본 연구의 변수들의 상관 관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주요 변수인 복지 인식은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부적상관( $r=-0.064$ ,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신뢰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r=-0.003$ ,  $p=.885$ ). 복지 인식을 기준으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과는 부적 상관( $r=-0.068$ ,  $p<.001$ )을 정치적 성향과는 정적 상관( $r=0.080$ ,  $p<.001$ )을 보였다. 성별( $r=0.026$ ,  $p=.188$ )과 교육수준( $r=-0.020$ ,  $p=.319$ ), 연령( $r=-0.031$ ,  $p=.107$ )과는 상관 없이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복지 인식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했음 <sup>1</sup>	정부 신뢰	성별: 여성 <sup>1</sup>	교육 수준	소득	정치적 성향	연령
복지인식	1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했음	-0.064**	1						
정부신뢰	-0.003	-0.003	1					
성별: 여성	0.026	-0.007	-0.036	1				
교육수준	-0.020	-0.004	-0.028	-0.183***	1			
소득	-0.068***	0.111***	-0.006	-0.049*	0.511***	1		
정치적 성향	0.080***	0.039	0.028	-0.029	0.129***	0.088***	1	
연령	-0.031	0.178***	0.055**	0.043*	-0.622***	-0.348***	-0.138***	1

\*p<.05, \*\*p<.01, \*\*\*p<.001; 1 명목변수로 처리하였음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정부신뢰에 따른 복지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연령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1은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정부신뢰, 복지인식변수만을 포함한 모형이다(R-squared=.006, F(2, 2404)=7.18, p<.001).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복지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S.E)=-0.485(0.131), p<.001). 정부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2에서는 모형1의 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R-squared=.031, F(8, 2396)=7.64, p<.001).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은 복지인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S.E)=-0.482(0.137), p<.001) 즉,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복지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S.E)=-0.033(0.028), p=0.235).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B(S.E)=-0.146(0.069), p<.05),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B(S.E)=0.321(0.068), p<.001) 복지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65세 이상보다 45세 이상 55세 미만(B(S.E)=-0.692(0.249), p<.01)과 55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B(S.E)=-0.807(0.251), p<.01)의 복지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미만 집단(B(S.E)=-0.055(0.255), p=0.830)과 35세 이상 45세 미만 집단(B(S.E)=-0.426(0.251), p=0.09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B(S.E)=0.224(0.129), p=0.082), 교육 수준(B(S.E)=-0.064(0.057), p=0.260)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3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 각 연령에 따른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정부 신뢰의 상호 작용항까지 모두 포함하였다(R-squared=.044, F(8, 2388)=4.24, p<.001). 그

결과, 연령 집단에 따라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복지 인식, 정부 신뢰와 복지 인식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복지인식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에 따른 복지 인식의 격차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35세 미만 집단(B(S.E)=1.283(0.417),  $p<.01$ )과 35세 이상 45세 미만 집단(B(S.E)=1.412(0.445),  $p<.01$ ), 45세 이상 55세 미만 집단(B(S.E)=0.935(0.447),  $p<.05$ )에서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전 집단과 경험 후 집단 사이 복지 인식 차이가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5세 미만, 35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55세 미만 집단은 65세 이상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복지 인식이 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정부 신뢰와 복지 인식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신뢰와 복지 인식의 관계에서 65세 이상보다 35세 미만 집단(B(S.E)=-0.299(0.082),  $p<.001$ )과 55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B(S.E)=-0.202(0.095),  $p<.05$ )에서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35세 미만과 55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에서 정부를 신뢰할수록 복지 인식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연령에 따른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정부 신뢰가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복지 인식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B	SE	B	SE
(Constant)	(18.315***)	(0.239)	(18.312***)	(0.370)	(17.731***)	(0.608)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했음 <sup>1</sup>	-0.485***	0.131	-0.482***	0.137	-1.378***	0.337
정부신뢰	-0.021	0.028	-0.033	0.028	0.100	0.061
성별: 여성 <sup>2</sup>			0.224	0.129	0.238	0.128
교육수준			-0.064	0.057	-0.070	0.057
소득			-0.146*	0.069	-0.148*	0.069
정치적 성향			0.321***	0.068	0.317***	0.068
연령 <sup>3</sup>	35세미만		-0.055	0.255	1.756*	0.750
	35세~45세미만		-0.426	0.251	-0.245	0.758
	45세~55세미만		-0.692**	0.249	-1.061	0.815
	55세~65세미만		-0.807**	0.251	0.695	0.857
	65세 이상		-	-	-	-
복지제도 도입경험 × 연령	경험했음 × 35세미만				1.283**	0.417
	경험했음 × 35세~45세미만				1.412**	0.445
	경험했음 × 45세~55세미만				0.935*	0.447
	경험했음 × 55세~65세미만				0.236	0.492
	경험했음 × 65세이상				-	-



정부신뢰 ×연령	정부신뢰×35세미만			-0.299***	0.082
	정부신뢰×35세~55세미만			-0.095	0.085
	정부신뢰×45세~55세미만			-0.010	0.092
	정부신뢰×55세~65세미만			-0.202*	0.095
	정부신뢰×65세이상			-	-
$R^2$	0.0059	0.0307	0.0442		
$R^2 change$	-	0.0247	0.0136		
$F$	7.18***	7.64***	4.24***		
df	(2, 2404)	(8, 2396)	(8, 2388)		

\* $p < .05$ , \*\* $p < .01$ , \*\*\* $p < .001$ . 1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없음이 기준범주; 2 남성이 기준범주; 3 65세 이상이 기준범주

##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정부 신뢰 정도가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연령이 이들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국적 대표성을 획득한 한국사회조사(KGSS)자료 4차(2006년), 14차(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는데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에 따른 복지 인식의 격차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 효과를 보였다.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35세 미만, 35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55세 미만의 세 개의 집단에서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전과 후의 복지 인식 차이가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5세 미만의 집단들은 65세 이상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복지 인식이 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 인식이 해당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기 이해(self-interest)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세 집단 중 '35세 미만 집단과 35세 이상 45세 미만 집단'이 45세 이상 55세 미만 집단과 비교했을 때, 보다 강력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45세 미만의 사회 구성원이 보육과 관련성이 높으며, 따라서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으로서 무상 보육이라는 제도가 자기 이해를 반영하는 정도가 더욱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sup>2)</sup>

2) 자기 이해의 측면에서 2008년 도입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보편적 복지경험으로써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수혜자 집단을 노인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노인 부모에 대한 돌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성인 자녀들도 수혜자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인 노인 부모에 대한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성인 자녀들은 이 연구의 대상집단 연령대 대부분에 걸쳐 분포하므로 하나의 연령집단에 배타적인 자기 이해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권승(2012)의 연구에서 연령이 감소할수록,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보육 서비스 확대를 지지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관된 방향을 보인다. 또한 남재욱·신혜리(2017)의 연구에서 복지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이해와 관련되었을 때 지지도가 더욱 높게 나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2013년 무상 보육 제도라는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의 여부가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이라는 자기 이해 효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이해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보육정책의 주요 정책 수혜대상 연령대와 다른 연령대—예를 들어, 노인소득 보장 정책—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에 대한 자기 이해 효과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보편적 복지제도 경험에 따른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당 제도와 자기 이해 관련성이 높은 연령대의 집단에 따른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2013년 보육 서비스 확대에 따른 무상 보육 실시를 기점으로 2013년 이후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복지 인식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의 조절 효과를 고려했을 때 연령대별로 낮아지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을 해보면, 이상록 외(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복지 태도 변화를 2010~2013년도와 2013~2016년도를 구분하여 비교하였는데 분석한 복지 인식 변수 중 하나인 '소득 격차 해소의 정부 책임성' 항목에서 2013~2016년도의 변화가 그 전보다 훨씬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와 6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 대체로 반복지적 방향의 변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 복지 태도의 역동적 변화가 정치 및 사회적 상황과 이슈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별 구분에 있어서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35세 미만 집단이 복지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여부 보다는 30대에서 보편적 복지 태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우세하다는 연구 결과들(이승주·박소영, 2019; 이정화·문상호, 2015)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을 경험한 집단의 복지인식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낮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 신뢰와 복지 인식의 관계에서도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65세 이상보다 35세 미만 집단과 55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에서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35세 미만 집단과 55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에서 정부를 신뢰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복지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Norris(1999)의 ‘비판적 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다. Norris(1999)는 ‘비판적인 시민(critical citizen)’이 정부 신뢰 기반 행동보다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 정치나 정부 역할의 기능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특징을 지닌다고 규정하였다(주성수, 2017; Doorenspleet, 2012). 즉, 35세 미만 집단이 고령층보다 신세대로서 ‘비판적 시민’의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서복경·황아란, 2015)을 고려했을 때, 이들 집단 내에서 복지 인식이 더 높은 집단은 그만큼 비판의식이 더 높고, 다른 한편 자신의 삶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 결정과 정책의 행사를 정부에 위임하기보다는 직접 참여에 의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사실상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집단을 기준으로 ‘55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의 부적 효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복지 정책이 그 중요도에 비해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더 적극적인 복지 확대에 정책 방향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서복경·황아란, 2012)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국적 대표성을 획득한 한국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 여부, 정부 신뢰 정도를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복지인식 사이의 상관관계가 한국 사회의 경우 연령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연령의 조절 효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복지 인식 형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여전히 사회 구성원의 자기 이해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의 복지제도에 따른 급격한 지형 변화에 대한 향후 심도 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6년과 2016년에 수집된 별도의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과정(data pooling)에서 생길 수 있는 추정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결합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모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분석모형의 추정 결과가 결합에 활용된 개별 자료와 결합자료 사이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Bass, & Wittink, 1975; Friedenreich, 1993). 이 연구의 경우 두 개의 자료가 10년의 시차를 두고 있으나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표집방법을 활용한 점을 고려했을 때 측정 시차에 따른 대상 집단의 구조적 차이를 제외하고 방법론적 이질성(methodological heterogeneity)(Friedenreich, 1993)은 상대적으로 덜 우려할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합자료 분석의 약점을 피하기 위해 두 개의 자료에 대해 개별적인 분석모형을 추정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 연구의 주요한 독립변수인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이 두 개의 자료가 하나로 결합되었을 때만 정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결합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지인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패널 자료가 아닌 2개의 시점에 걸쳐 수집된 횡단자료를 활

용하였는데 정부 신뢰 같은 독립변수와 복지 인식이라는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볼 때, 10년 차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분석하였지만 두 개의 다른 집단에 대해 10년의 격차를 두고 측정한 만큼 복지 인식과 정부 신뢰 등 자체의 지형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복지 인식은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상정할 때에 2개년도 데이터의 응답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정교한 분석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부터 사회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풍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와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 ■ 참고문헌 ■

- 강정희, 염동문(2014).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0(2). 319-351.
- 국회예산정책처(2021).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NABO포커스 제30호.
- 권승(2012). 보육서비스에 대한 복지태도 형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4). 205-230.
- 김사현, 홍경준(2010).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37(2). 95-121.
- 김사현(2012).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층차이분석. *한국사회정책*. 19(1). 9-38.
- 김수정, 남찬섭(2015). 서민은 복지확대를 지지하는가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명제를 넘어서. *사회복지연구*. 46(4). 351-374.
- 김영순, 여유진(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1. 211-240.
- 김영순, 여유진(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사회경제적 지위변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자료집*. 85-115.
- 김윤태, 유승호, 이훈희(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 183-212.
- 김종해(2005).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전망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215.
- 김지범, 강정환,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윤석, 최성수, 최슬기, 김솔이(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현진(2012). 우리나라 무상보육정책과 사회적 형평성: 사회 정의론적 관점의 접근. *한국영유아보육학*. 72(9). 419-445.
- 김희자(2013).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서언론*. 16. 59-88.
- 남재욱, 신혜리(2017). 기초연금 수급경험에 따른 수급자의 복지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3(2). 41-75.
- 노대명, 전지현(2011).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혜진, 이현옥, 김윤민(2018). 제도별 복지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기초연금, 청년배당, 무상급식, 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4(1). 79-105.
- 류만희, 최영(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191-210.
- 류진석(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 박찬웅, 정동철, 조선미, 김노을(2014). 복지인식의 사회적 배태성: 영역별 국가의 복지책임지지 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사회보장연구*. 30(1). 105-141.
- 배정현(2013). 시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와 태도. *한국행정논집*. 25(4). 1329-1344.
- 백선희(2015).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보육재정 분담 쟁점 분석: 영아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5(1). 299-334.
- 백정미, 주은선, 김은지(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319-344.
- 서복경, 황아란(2012).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 중심의 정책평가: 고령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5(1). 5-34.

- 손병돈(2016).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4). 5-34.
- 안상훈(2003). 친복지동맹의 복지지위균열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비교연구 스웨덴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사회복지연구. 21. 79-104.
- 이상록, 김형관(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29(3). 433-458.
- 이상록, 이순아, 김형관(2017).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 개인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 사회복지연구. 48(4). 59-89.
- 이승주, 박소영(2019).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3(2). 153-173.
- 이정원, 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화, 문상호(2015). 한국 복지국가의 향방에 대한 젊은 세대의 복지태도 예측: 30대 및 40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6. 165-194.
- 이재무, 송영선(2012).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2. 379-399.
- 이진숙(2012). 보육아젠다를 통해서 본 공공성의 동학. 보건사회연구. 32(4). 361-390.
- 이태수(2016). 한국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논쟁과 대응 전략. 비판사회정책. 52. 330-364.
- 이현우, 박시남(2016).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개인이익을 넘어서. Oughtopia. 31(1). 267-298.
- 임재영, 문국경(2019).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과 정치신뢰의 함의. 행정논총. 57(3). 33-62.
- 주성수(2017). 한국 시민사회 30년(1987-2017)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시민사회와 NGO. 15(1). 5-38.
- 주혜린, 황정윤(2020). 사회복지서비스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연령대와 사회이동성,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4). 465-483.
- 최고은(2016).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125-150.
- 최유석(2011).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57-83.
- Andreß, H.-J. & Heien, T.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4). 337-356.
- Arikan, G. & PBN Bloom. (2016). Social values and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welfare. Political Studies. 63(2). 431-448.
- Bass, F., & Wittink, D. (1975). Pooling issues and methods in regression analysis with examples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2(4), 414-425.
- Blekesaune, M. & Quadagno, J. (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415-427.
- Bonoli, G. & Häusermann, S. (2009). Who wants what from the welfare state? Socio-structural cleavages in distributional politics: Evidence from Swiss referendum votes. European societies. 11(2). 211-232.

- Brady, D. & Bostic, A. (2015). Paradoxes of social policy: Welfare transfers, relative poverty, and redistribution preferen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0*(2). 268-298.
- Busemeyer, M. R., Abrassart, A & Nezi, R. (2019). Beyond positive and negative: New perspectives on feedback effects in public opinion on the welfare stat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137-162.
- Daatland, S. O., Veenstra, M. & Herlofson, K. (2012). Age and intergenerational attitudes in the family and the welfare stat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7*(3). 133-144.
- Dallinger, U. (2010). Public support for redistribution: what explains cross-n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4). 333-349.
- Doorenspleet, R. (2012). Critical citizens, democratic support and satisfaction in African democraci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3*(3). 279-300.
- Edlund, J. & Lindh, A. (2015).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revisited: the welfare state, social cohesion and political conflict. *Acta Sociologica*. *58*(4). 311-328.
- Edlund, J. (2006). Trust in the capability of the welfare state and general welfare state support: Sweden 1997-2002. *Acta Sociologica*. *49*(4). 395-417.
- Esping-Andersen, G. (1990).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 Friedenreich, C. (1993). Methods for pooled analyses of epidemiologic studies. *Epidemiology*, *4*(4). 295-302.
- Gainous, J., Craig, S. C. & Martinez, M. D. (2008). Social Welfare Attitudes and Ambivalence about the Role of Government. *Politics & Policy*. *36*(6). 972-1004.
- Garritzmann, J. L., Neimanns, E. & Busemeyer, M. R. (2021). Public opinion towards welfare state reform: The role of political trust and government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 Gugushvili, A. (2015). Self-interest, perceptions of transition and welfare preferences in the New Eastern Europe and the South Caucasus. *Europe-Asia Studies*. *67*(5). 718-746.
- Hetherington, M. J. (2004). *Why trust matter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cques, O. & Noël, A. (2018). The case for welfare state universalism, or the lasting relevance of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8*(1). 70-85.
- Korpi, W. &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61-687.
- Norris, P.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Larsen, C. A. (2008). The institutional logic of welfare attitudes: How welfare regimes influence public suppor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2). 145-168.
- Pierson, P. (2001).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ekhoff, A. J. (2021). Pension reforms, the generational welfare contract and preferences for pro-old welfare policies in Europ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5*(3). 501-518.
- Vrooman, J. C. (2012). Regimes and cultures of social security: Comparing institutional models through nonlinear PC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3*(5-6). 444-477.

Abstract

## Relationship among Universal Welfare Experience, Government Trust, and Welfare Attitud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Jinseok Kim\* · Yeonhee Oh\*\* · Dongin Shi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universal welfare policy, specifically the universal free childcare policy of 2013 in Korea, government trust, and welfare attitude, and to test the moderation effect of age on the relationships. For this analysis, we combined data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of 2006 and 2016, which were the two years that included the welfare attitude related questions in KGSS and were the closest years around the introduction of the universal free childcare policy of 2013.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ence of universal welfare policy was associated with lower level of welfare attitude and that the government trust was not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welfare attitude. The moderation effect of age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al welfare policy experience and the welfare attitude and between the government trust and the welfare attitude as well. Specifically, the difference in welfare attitude between those who experienced the universal welfare policy and did not were smaller in age of 55 years or younger than in the age of 65 or older. Also,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welfare attitude and government trust was stronger in age of 35 or younger group or in age between 55 and 65 group than in age of 65 or older group.

This study distinguished itself from the previous body of research in that it used the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of KGS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ttitude and the universal welfare policy experience and government trust. Furthermore, the test of age as a moderator of welfare attitude related relationship implies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role of citizen's self-interest to understand better the welfare attitude related factors.

**Keywords:** welfare attitude; experience of universal welfare policy; free childcare; government trust; moderation effect of age

◆ 2022. 7. 14. 접수 / 2022. 8. 30. 1차수정 / 2022. 9. 22. 게재확정

\* Seoul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jskim@swu.ac.kr)

\*\* Seoul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oyh@swu.ac.kr)

\*\*\* Seoul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ishin36@gmail.com)